

잠녀 바깥물질 경제 보다 사회적 요인 컸다

안미정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탐라문학」 37호 게재 논문서
일제 식민지 하 ‘우뭇가사리’ 수출·해방 이후 어장 분쟁 심화 ‘합법적 어로권’ 부각

등록 : 2010년 10월 27일 (수) 00:15:29

최종수정 : 2010년 10월 27일 (수) 00:15:29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자원 획득 등 경제적 이유로 바깥물질을 나섰던 제주 잠수들이 타지에 정착하게 된 것은 식민정책 유산인 ‘자유 입어’로 인한 분쟁과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합법적 어로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미정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는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학」 제37호에 게재한 논문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지역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안 연구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바깥물질’로 불리는 제주 잠녀들의 반복적인 어로패턴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해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 이유로는 제주사회의 내적 변동보다는 식민지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외적 요인이 컸다.

실제 잠녀들의 이동이 시작된 것은 15세기 후반 무렵으로 흉년과 재해, 부역과 공물의 가중, 왜구의 출몰 등을 피해 출륙했다는 기록 등이 확인되고 있다.

식민지시대에 들어서며 바깥물질이 활성화됐지만 경제적 벌이를 위해 타지에서 한시적 노동을 한 후 귀향하는 패턴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일본의 비단산업 발달과 공업원료로 사용했던 ‘우뭇가사리’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안 연구교수는 제주 잠녀 바깥 물질의 사회적 요인으로 △식민지 정책 하 일본 어업자의 어획 본격화 △어장 황폐화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 △일본 자본을 매개로 한 상인집단을 꼽았다.

해방 이후에도 잠수들의 이동은 계속됐지만 이 때부터 이동 범위가 한반도 이남으로 국한됐으며, 이동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격화됐다.

안 연구교수는 “식민지 정책 하에서 허용되던 자유입어권과 경제 착취가 해방 이후 지역 분쟁과 권익·인권을 주장하는 배경이 됐다”며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합법적 어로권은 잠녀들의 현지 정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